

통일정세분석 2001-02

2001년도 북한의 대내외 정책 전망

북한연구실

< 요약 >

2001년도 북한의 대내외 정책 전망

I. 분야별 정책

<정치분야>

- 북한은 김정일을 21세기의 지도자로 부각·선전함으로써 김일성과는 구별되는 김정일의 독자적 지도력을 강조할 것으로 보임.
 - 「선군정치」의 지속을 통해 내부결속과 김정일 정권의 안정을 다지는 가운데, 대외협상력을 강화
- 경제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적극적 경제정책의 추진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, 당대회 개최 등을 통해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통치의 복원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.

<경제분야>

- 북한은 경제정책에 있어서 전향적 변화를 추진할 것으로 판단됨.
 - 대내적으로 농업부문의 초보적 개혁과 기업경영조직 및 산업구조 개편 등의 정책을 가속화하고,
 - 대외적으로는 중국 및 EU와의 관계개선을 통한 수출시장 확보와 기술·자본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며, 신의주 등에 시장기능이 강조된 경제특구 건설이 예상된다.

<군사분야>

- 북한은 군사중시사상을 기반으로 군대의 위상을 높임으로써 군대의 충성을 지속적으로 유도할 것임.
 - 군이 혁명적 군인정신으로 무장하여 ‘사상의 강군’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군에 대한 정치·사상교육을 강화하고,
 - 동시에 물리적 군사역량 강화에도 주력할 것으로 보임.

<대남분야>

- 북한이 『6·15 남북공동선언』의 철저한 이행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통일운동 활성화, 남북경제협력 지속, 남북한 국회회담, 이산가족교류 등 정치·사회·문화 교류 확대를 적극 추진할 것으로 전망됨.
 - 이러한 조치의 일환으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서울 답방 가능성이 큼.
 - 그러나 북한은 남한의 한반도 군사적 긴장완화 조치 관련 제의에 대해 계속해서 미온적인 태도를 견지할 것으로 전망됨.

<대외분야>

- 북한은 적극적이고 공세적인 외교활동을 전개할 것으로 전망됨.
 - 북한은 대미관계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으로 보이나 부시 행정부가 ‘힘의 외교’를 표방하고 있고, 특히 북한에 대해 엄격한 상호주의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, 향후 북·미관계 진전에 난

관이 조성될 가능성이 큼

- 일본과의 수교협상을 지속할 것이나, 북측은 사죄와 보상을, 일본측은 납치문제 및 미사일 문제해결을 요구하고 있어 협상 타결은 쉽지 않을 것임.
- 경제문제, 남북관계, 대미관계 등을 고려하여 대중·러 협력외교를 더욱 강화함에 따라 북·중·러 간의 새로운 협력체제가 심화될 가능성이 있음.
- 대유럽 관계개선에 주력함으로써 대외개방 확대를 위한 기반을 조성할 것임.

II. 정책적 고려 사항

<구체적인 대북 지원대책 강구>

- 북한은 점차적으로 정권의 안정을 회복해 감에 따라 보다 자신감을 가지고 경제특구 건설 등 대외개방의 폭을 넓혀 나가고자 할 것인 바, 북한의 이러한 개방추세가 지속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지원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.

<전향적인 대북 접근자세 견지>

- 북한은 「6·15 남북공동선언」 이행을 강조하면서 ‘남북한의 그 누구와도 접촉하고 대화’할 것이며 남북한의 교류와 협력이 지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함으로써 전방위 남북대화에 적극성을 보이고 있는 데 대하여 보다 전향적인 자세로 접근할 필요가 있음.

<대미외교 강화>

○북한은 미국의 부시 행정부의 대북 강경 노선 표방에 대응하여 중국 및 러시아와 새로운 협조체제를 구축하고자 노력함으로써 한반도 주변에는 '새로운' 냉전구도가 형성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바, 미국의 강경 일변도의 대북 노선을 완화하기 위한 대미외교를 강화해야 함.

목 차

I. 문제제기	1
II. 부문별 정책	2
1. 정치분야	2
2. 경제분야	5
3. 군사분야	10
4. 대남분야	14
5. 대외분야	22
III. 정책적 고려사항	27
최근 발간자료 안내	29

I. 문제제기

- 북한은 신년 공동사설을 통해서 지난해를 「고난의 행군」을 이겨낸 신념의 강자, 의지의 강자들의 대행진이었으며, 20세기를 빛나게 총화한 한해였다고 평가함으로써 정권안정에 대한 자신감을 표출 하였음.
- 정치적 안정에 대한 이러한 자신감에 기초하여 김정일은 ‘新사고’를 의미하는 사고방식의 혁신 강조, 전격적인 중국 방문, 서방선진국과의 활발한 수교 단행 등 대내외적으로 상당히 의욕적인 활동을 전개해 오고 있음.
- 또한 북한은 「6·15 남북공동선언」 이행을 강조하고, 이를 역사적 행사로 기념하기 위해 6월 15일부터 8·15 광복절까지를 「6·15 ~ 8·15 민족통일촉진운동기간」으로 설정할 것을 제의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대남태도를 표출하고 있음.
- 따라서 본 보고서는 북한의 이러한 대내외적 행태의 함의를 분석하고, 향후 북한의 대내외 정책방향을 전망해 보고자 함.

Ⅱ. 부문별 정책

1. 정치분야

가. 개요

- 체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북한은 대외적으로 유연하고도 다양한 전술을 구사하여 왔으나, 대내적으로는 사상, 정치, 군대의 중요성을 일관되게 강조하면서 체제의 결속을 다져오고 있음.
 - 금년 공동사설은 예년과 달리 특별한 구호나 내용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으나, '자주정치'와 '단결의 정치'를 구호화하여 「우리식 사회주의」의 고수과 김정일에 대한 충성심을 강조함.

- 금년 공동사설에서 정치적 안정에 대한 자신감을 강하게 표출하고 있으나 뚜렷한 비전의 제시나 정치적 변화에 대해 주목할 만한 특징을 보이고 있지 않음.

- 남북관계와 대외관계의 변화과정에서 김정일 정권의 안정을 위하여 김정일 개인에 대한 권위와 위상제고 노력을 한층 강화할 것임.
 - 공동사설에서 21세기는 김정일의 시대가 될 것임을 지적, 미래의 지도자로서 김정일의 위상을 제고하고자 함.

나. 분석

<「우리식 사회주의」 고수>

- 공동사설은 2000년에 ‘우리식 사회주의의 이념, 우리의 제도, 우리의 위엄을 끝까지 고수’하여 세기의 마무리를 잘한 것으로 평가하고, 새해에도 ‘붉은기를 더욱 높이 휘날리며 힘차게 전진’할 것을 강조하였음.
- 북한식 혁명과 북한의 실정에 맞게 모든 문제를 풀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는 등 이념, 정치체제, 혁명방식을 고수할 것을 다짐 함.
 - 이를 김정일의 ‘자주정치’로 규정
- ‘사회주의붉은기진군’과 ‘우리식 사회주의’ 등을 강조한 것은 남북 정상회담이후의 남북관계개선과 대외관계개선노력에 따른 내부 동요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보임.

<김정일에 대한 충성과 권위제고>

- 김정일에 대한 충성을 ‘단결의 정치’로 구호화하여 강조함.
 - 단결은 사회주의 정치의 근본이며, 일심단결의 위력은 수령결사옹위에 있다고 강조
 - ‘복잡다단한 세계정치를 주도’하였다는 등 김정일의 세계무대에서의 등장을 부각

- 김정일위원장이 21세기의 지도자임을 부각시킴으로써, 김일성의 단순한 후계자에서 벗어나 그의 독자적 리더십을 강조하고자함.
 - 그러나 김정일의 독자적 리더십 강조가 김일성 시대와의 단절이나 부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.
 - 김정일의 권위와 리더십의 정통성은 김일성과의 연속선상에서 가능

<정치적 안정에 대한 자신감>

- 사회주의붕괴론이 파산되고 북한체제가 불패의 사회주의 성채로 거듭났으며, 5천년 민족사에서 오늘처럼 국제적 지위가 높았던 점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등 우리식 사회주의체제와 김정일 정권의 안정에 대한 자신감을 과시함.

다. 전망

<김정일의 위대성 부각지속>

- 김정일을 21세기의 지도자로 선전함으로써 김일성과는 구별되는 김정일의 독자적 지도력을 지속적으로 강조할 것으로 보임.
- 북한은 「선군정치」의 지속을 통해 내부결속과 김정일 정권의 안정을 다지는 가운데, 대외협상력을 강화시키려 할 것임.
 - “선군혁명노선은 우리 시대 혁명의 영원한 전략적 노선”이라고 강조하고 “선군 혁명의 길에 자주도 있고 단결도 있으며 애국애

족도 있다”고 강조

<당대회 개최 가능성>

- 경제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적극적 경제정책의 추진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국가기구 뿐만 아니라 당기구의 정상화를 통한 제도적 통치의 복원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.
- 이를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은 당대회를 개최하여 당조직을 정비하고, 주요 결원을 보충하며 정치국, 비서국 등의 기능이 정상화되어야 할 것임.
- 당대회 개최를 위한 재원마련의 어려움과 중장기 경제개발계획의 부재 등으로 당대회 개최가 무산될 경우 대신 대표자회가 개최될 가능성도 있음.
 - 당창건 55주년이었던 지난해와는 달리 당의 역할에 대한 강조가 비교적 두드러지지 않고 있으며,
 - 향후 남북관계에 대한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남조선혁명노선에 대한 당규약의 존폐여부 등에 대한 입장정리에 대한 고충도 있을 것으로 보임.

2. 경제분야

가. 개요

- 2001년 북한은 경제부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경제발전에 국력을 집중시키고자 함.
 - 신년 「공동사설」에서 강성대국론의 구체적 요소로서 ‘국가경제력’의 개념 제시
 - ‘군력’과 ‘정치사상적위력’의 선행조건으로서 ‘경제력’의 중요성을 강조

- 식량난이 완화됨에 따라 ‘생존’보다는 ‘발전’에 초점을 맞추어 경제정책의 우선 순위를 변화시킬 것으로 보임.
 - 기술력의 발전을 통한 산업기술 현대화와 첨단산업 육성
 - 현재의 경제적 토대를 기반으로 산업 정상화와 경제적 효율성 제고를 도모

- 김정일식 새로운 경제정책 노선이 가시화되고, 정책변화의 속도가 빨라질 것임.
 - 금년도 신년 「공동사설」과 중국 방문(1.15~20)을 통해 혁신의 필요성과 경제관리체계의 개선을 강조하고 중국의 경제개혁 성과를 높이 평가함으로써 경제정책 변화의 가속화에 대한 지도부의 의지를 표현

나. 분석

<‘국가경제력’ 증대를 위한 현실적 접근>

○2001년 「공동사설」에서 “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21세기에 상응한 국가경제력을 다져나가는 것보다 더 중대한 과업은 없다”라고 하여 경제회생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출하였음.

- 이는 경제력 건설을 ‘보다 큰 힘을 넣어야 할 전선’(2000년 공동사설) 또는 ‘가장 중요한 과업’(노동신문사설 2000.7.8)으로 규정한 것에 비해 보다 강력한 경제회생 의지의 표현임.

○특히 ‘현존경제토대’의 정비와 기술개조를 거론한 것은 투자재원 부족이라는 현실적 제약여건을 인식, 경제건설에 대한 실용적 접근 방법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음.

<새로운 김정일 경제정책 노선의 가시화>

○최근 북한 언론매체가 「변혁」의 필요성과 경제정책의 「실효성」에 대해 반복 강조하면서도 사회주의 계획경제 등 기존의 체제 옹호적인 내용의 비중을 축소하고 있는 것을 고려해 볼 때, 북한 경제정책의 「김정일 노선」이 가시화 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.

- “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사상관점과 사고방식, 투쟁기풍과 일본새에서 근본적인 혁신을 이룩해 나가는 것은 우리 앞에 나선 선차적 과업” 및 “김정일 동지식으로 (생략) 낡은 관념에서 벗어나 (생략)” 등의 내용(2001년 공동사설)은 새로운 정책 채택의

임박성을 표현

○북한 당국은 농업을 비롯한 경제의 모든 영역에서 ‘종자론’을 철저히 구현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혁신적인 사고방식과 실효성을 중시하는 가치체계를 신속히 전사회 영역에 확산시키고, 덜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과거의 사상체계나 제도적 한계를 탈피해야 한다는 이념적 방향을 제시하고 있음.

※ 김정일의 문학예술에서 종자란 작품의 핵이며 사상적 알맹이로서 ‘종자론’은 작품의 핵이 작품의 내용에 일관성 있게 녹아들어 있어야 한다라는 의미로 해석되므로, 경제분야에 있어서의 ‘종자론’은 새로운 김정일식 사고방식과 변혁의 논리가 전 사업분야에서 핵심적인 고리로 작용해야 한다는 점을 의미

○‘사고방식’의 혁신을 강조하는 새로운 경제정책은 김일성 노선의 연장선상에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발상의 전환으로 해석됨.

- 본격적인 김정일 시대의 개막에 따라 ‘자력갱생’, ‘자립적 민족경제’ 등과 같은 이념적 한계를 나타냈던 과거의 주장과는 달리 실물 경제적 과급효과를 고려한 실용적 경제정책을 채택

<기술현대화 중시 정책 추진>

○2001년도 북한은 기술재건, 전력·석탄·금속·철도, 1차 소비품·기초식품, 농업(종자혁명·감자농사혁명·두벌농사), 자연개조사업(토지정리·물길공사) 등에 역점을 둔 경제정책과 기술재건을 통해 산업

기반 현대화 및 농업생산 증대에 역점을 둘 것임.

- 신년 「공동사설」에서 대규모수력발전소 ‘건설’, 금속공장 ‘설비현대화’, 철도운수 ‘정비보수’ 등을 주장한 것은 금년도에 주요 신규투자는 전력·에너지 부문에 집중하고, 여타부문에 대해서는 기존의 설비개체 및 보수·정비를 추진할 것임을 나타내고 있음.

다. 전망

<‘초보적’ 경제개혁정책 추진>

○북한은 경제정책에 있어서 전향적 변화를 추진할 것으로 판단되며, 대내적으로는 농업부문의 초보적 개혁과 기업경영조직 및 산업구조 개편 등의 정책을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됨.

- 협동농장체제하에서 가족단위 중심의 인센티브제공을 통한 농업구조 개혁과 공업기업소의 지배인 책임제와 같은 실험적 조치들이 취해질 가능성이 있음.

<대외개방의 가속화: 경제특구 건설>

○중국 및 EU와의 관계개선을 통한 수출시장 확보와 기술·자본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며, 신의주 등에 시장기능이 강조된 경제특구 건설이 예상됨.

- 새로운 경제특구는 중국경제와의 연계성(수출입 및 기술·자본 유입)에 의존할 것인 바, 신의주와 남포가 유력하나 남북관계가 진전될 경우 개성공단도 포함될 것임.

○경제적 측면에서 볼 때, 김정일의 중국방문은 경제정책 변화의 방향설정 및 경제개혁시 요구되는 외부지원 확보, 중국경제와의 연계성 확대를 통한 경제특구 건설 등을 위해서 추진된 것으로 보인다.

- 북·중경제관계의 진전은 남한기업의 대북 투자동기 제공이라는 측면에서 남북경협 확대에 기여하게 될 것이며,
- 남한기업의 적극적 진출 없이 중국기업의 대북 인식 개선이 어렵다는 측면에서 남북경제관계와 상호 보완적 측면이 강함

<선별적인 남북경협 추진>

○북한의 식량난은 에너지난과 함께 여전히 북한경제 발전의 가장 중요한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므로, 북한은 남북경협을 통해 식량 및 에너지 부족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하고, 선별적인 부문의 경협을 확대시키려 할 것임.

- 체제과급효과를 감안, 정부차원의 남북경제관계는 식량 및 에너지 지원 획득에 초점을 맞출 것이며, 민간차원의 남북경협사업은 위탁가공과 관광사업 확대 및 사업권 제공에 따른 현금 수입 확대에 중점을 둘 것임.
- 경의선 복원사업, 금강산 관광사업 영역의 확대, 개성공단 건설 등은 체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남측으로부터의 지원을 최대한 확보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것임.

3. 군사분야

가. 개요

- 이번 공동사설에서도 「선군혁명로선」을 관철할 것을 독려함.
 - “군사선행의 원칙에서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풀며 혁명군대를 주력군으로 하여 사회주의위업을 밀고 나가는 우리당의 혁명방식은 앞으로도 변함이 없다”고 하면서
 - “선군혁명시대의 요구에 맞게 우리의 군력을 불패의 것으로 다져나가야 한다”고 강조

- 이에 따라 북한군대는 ‘혁명적 군인정신’을 양양하고 ‘전투정치훈련’을 강화함과 동시에 군·민 일치를 위해서 노력할 것을 주장함.

나. 분석

<공세적 군사태세 자제>

- 북한은 ‘군사강국’(1999), ‘총대중시’(2000) 등의 용어를 사용하면서 인민군대의 물리적 위력을 과시하고자 하였으며,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'98년의 대포동 미사일 시험발사를 부각 선전하면서 대외적으로 공세적인 군사태세를 견지해 왔음.

- 이에 따라 북한은 한반도에서도 군사적 긴장을 조성하는 공세적인 군사태세를 보여왔음.

- 특히 북한은 '99년 서해군사위기 사태(서해해전) 조성 및 2000년 서해 NLL 불인정 담화를 발표(3.2)한데 이어 「서해 5개섬 통항 질서」를 공포(3.23)하여 서해군사위기를 재 조성
 - ‘인공위성’ 재발사 위협
- 그러나 남북정상회담 합의(4.10) 이후에는 공세적 군사태세를 자제하는 입장을 견지해 왔음.
- 조업중 북측에 표류하게 된 우리측 어선(6.15, 「결성호」)을 즉각 송환하기도 하였으며, 서해 꽃게잡이 조업철에도 북방한계선 침범을 자제하는 모습을 보였음.
 - 작년 11월 5일 “남측 해군함정이 북측영해를 침범”하였다고 비난하면서도 새로운 군사적 긴장조성과 같은 공세적 태도를 자제하였음.
 - 대미 차원에 있어서도 ‘미사일 발사유예조치’ 유효 재확인(9.20), 제 5~6차 북·미 미사일 회담 개최, 조명록 총정치국장의 방미, 올브라이트 미국무장관 방북 등으로 우호적 태도를 보이고 있음.
- 대외적 공세태세를 자제하는 북한의 입장은 2001년 공동사설에도 잘 반영되고 있음.
- 공동사설은 ‘선군혁명로선’은 강조하고 있으나 공세적인 군사태세 표현은 부재
- 북한의 이러한 군사적 기조 유지는 새로 출범하는 미국의 부시 행정부를 자극하지 않으면서 남한과의 대화분위기를 지속시켜 나가

기 위한 의도로 분석됨.

<‘선군혁명로선’ 강조를 통한 군의 충성유도와 동원체제 유지>

- 북한은 대내적으로 여전히 군사를 중시하는 ‘선군혁명로선’을 강조하여 군의 충성유도와 ‘사회주의 경제건설’ 동원을 고무시키고 있음.
- 동시에 ‘정신 도덕적 풍모와 투쟁기풍, 문화정서생활 등 모든 면에서 인민군대를 사회의 본보기’로 만들어 인민동원을 정당화하면서 대내적 체제단속을 꾀함.

다. 전망

<군대의 충성유도를 위한 군사중시 고수>

- 북한은 군사중시사상을 기반으로 군대의 위상을 높임으로써 군대의 충성을 유도할 것임.
- 또한 군이 혁명적 군인정신으로 무장하여 ‘사상의 강군’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군에 대한 정치·사상교육을 강화할 것임.
- 이러한 정치·사상교육은 김정일 정권의 군통제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될 것임.

<물리적 군사역량 강화>

- 북한은 김정일 정권 공고화 차원에서 물리적 군사역량이 모든 대

내외적 위협을 차단할 수 있는 핵심요소로 판단하고 이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것임.

- 당분간 중장거리 미사일 개발 배치 추진, 전방지역의 장사정포 증강배치 및 후방지역 침투수단의 부분적 강화 등 ‘불균형 전력 증강’ 행태를 지속

<군사적 긴장완화 조치에 대한 미온적인 태도 견지>

○북한은 남한의 한반도 군사적 긴장완화 조치 관련 제의에 대해 계속해서 미온적인 태도를 견지할 것으로 전망됨.

- ‘선군정치’, ‘군사제일주의’ 등의 기치 아래 대내외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남한의 군사적 제의를 수용하기보다는 지연전술로 일관할 가능성이 큼.

4. 대남분야

가. 개요

○2001년 벽두부터 북한은 「공동사설」(1.1), 「우리민족끼리 통일의 문을 여는 2001년 대회」(1.10) 등을 통해 지난해 6월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조성된 남북 화해분위기 유지는 물론 이를 한 단계 높이려는 적극적인 대남 태도를 보였음.

- 공동사설은 ‘6·15남북 공동선언’의 철저한 이행을 강조함과 함께 ‘괴뢰’ 등 원색적 표현을 삼가고 ‘화합’, ‘단결’ 등 완곡한 표현을 사용

- 「우리민족끼리 통일의 문을 여는 2001년 대회」에서는 ‘동족과 공조’ ‘남조선의 그 누구와도 접촉하고 대화’ 등의 표현을 사용, 남북대화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 표명

○북한은 남북공동선언을 ‘21세기 조국통일의 이정표’로 높이 평가하고 평화통일을 위해서는 ‘연방제 방식의 통일을 지향해 나가야 한다’고 강조함과 동시에 남한의 연합제를 고려, ‘연방·연합제’를 제안하였음.

- 「6·15남북공동선언」에서 표명된 연합제와 낮은 단계 연방제의 공통성 인정하에 남북통일 지향

나. 분석

<「6·15 남북 공동선언」 이행 강조를 통한 통일운동 열기 확산>

○북한은 「6·15공동선언」을 ‘민족사적 사변’, ‘조국통일 3대원칙에 기초하고 있는 자주, 평화통일, 민족대단결 선언이며 21세기 조국통일의 이정표’로 높이 평가하고 있음.

- ‘6·15 북남공동선언을 철저히 리행’하는 것이 통일달성을 위한 ‘중대하고도 원칙적인 문제’라고 주장함으로써 공동선언 실천 의지 천명

○이와 함께 북한은 「6·15 남북 공동선언」을 역사적 행사로 기념하기 위해 6월 15일부터 8월 15일 광복절까지를 ‘6·15~8·15 민족통일촉진운동기간’으로 설정할 것과 광복절을 ‘전민족적인 통일대축

전'으로 장식할 것을 제외하였음.

- 이는 「6.15 남북 공동선언」이행 강조를 통하여 북한식 남북통일운동 열기를 대내외적으로 확산시키고자 하는 북한의 의도로 분석됨.
- “북과 남 해외의 모든 조선동포들은 사상과 제도, 정견과 신앙의 차이를 초월하여 6·15남북공동선언을 관철하기 위한 거족적 투쟁에 합류하여야 한다”고 주장
- ‘노동자, 농민, 청년학생, 지식인, 자본가, 종교인’ 등의 공동선언이행을 위한 단합과 ‘거족적인 운동’을 촉구
- 특히 남한의 연합제 주장을 고려하여 ‘연방·연합제’라는 표현을 새로 사용함으로써 남한 보수층의 반발을 최소화하면서 연방제를 관철하고자 하는 의지를 표출

<「6·15 남북 공동선언」 이행 차원의 경제협력 강조>

- 북한은 지난 해 4차 장관급회담에서 합의된 전력협력, 도로연결, 임진강 유역 수해방지 사업, 동해어장 제공문제 등 경제협력 문제의 실천을 강조함으로써 경제협력의 지속 필요성을 제기하였음.
- 사회 각 분야에서의 협력사업 또한 강조
- 이는 「6·15 남북 공동선언」 실천 명목으로 남한으로부터 지속적인 경제적 실리를 획득하고자하는 의도로 판단됨.
- 북한은 최근 남한의 경제적 문제가 심화됨에 따라 제기되고 있는 대북경협 사업에 대한 속도조절 등의 부정적 여론을 차단하

는 동시에 지속적인 남북경협에 대한 우호적인 여론의 확산 필요성을 인식

<남북 당국과 정치인의 접촉 및 대화 필요성 부각>

○북한은 남북 당국과 정치인들의 화해와 단합을 강조하고 ‘여당과 야당, 진보와 보수를 가림 없이 남조선의 누구와도 접촉하고 대화’ 할 것을 천명함으로써 남북 당국과 정치인의 접촉 및 대화 필요성을 부각시킴.

- 기존의 당국간 대화를 기피해 오던 태도에서 벗어나 본격적인 남북 당국간 접촉과 대화를 통해 남한으로부터 지속적인 경제적 이득을 취하며,
- 남북간 ‘정치대화’를 유도함으로써 남한 정치권의 분열을 모색

다. 전망

<김정일위원장의 남한 방문>

○북한이 ‘6·15 남북공동선언’의 철저한 이행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답방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됨.

- 통일관련 김정일의 치적 선전, 남한의 지속적인 대북지원 유도 등의 필요성으로 인해 김정일 위상 제고 차원의 남한 방문 가능성 다대
- 시기는 남한의 국내정치경제 상황, 미국 부시 행정부의 대한반도 정책 향방 등을 감안하여 결정될 것이나, ‘6·15~8·15 민족통

일촉진운동기간'내의 방문 가능성이 높음.

<통일방안 논의 활성화>

- 북한은 「6.15 남북공동선언」에서 연합제와 낮은 단계 연방제의 공통성을 인정한 것을 들어 ‘통일 이정표’로 높이 평가하고 있는 바, 김정일은 남한 방문시 통일방안을 주의제로 삼을 가능성이 큼.
- 특히 북한이 ‘연방·연합제’라는 새로운 용어를 제시한 것으로 보아 김정일 남한 방문시 기존의 연방제가 아닌 새로운 형태의 통일방안을 제시할 가능성도 있음.

<남한의 대북지원 확보 극대화>

- 금강산관광을 통한 외화획득, 식량 및 비료 획득 등 남한으로부터 다양한 실리를 획득하고 있는 북한은 전력난 해결을 위한 50만 Kw 전력지원 요청 등 각종 대북 경제지원에 관심을 표명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남북간 경제분야 협력은 매우 활발히 전개될 것으로 전망됨.
 - 전력지원을 위한 전력협력실무위원회 개최
 - 경의선 및 문산-개성간 도로연결 협의
 - 임진강 유역 수해방지 사업 협의
 - 동해어장 공동개발 문제 협의 등
- 특히 김정일 방중시 상하이지역 IT산업시설에 대한 관심표명의 정도로 보아 북한은 외국자본에 의한 경제특구 활성화 모델인 ‘상

하이식' 특구 정책을 채택할 것으로 전망되는 바, 신의주 및 개성 지역에 대한 남한 투자유치를 적극화할 것으로 전망됨.

<남북 국회회담 재개>

○북한은 여야를 떠나 '6·15공동선언'의 실천을 강조하고 이에 동의하는 누구와도 대화할 의지를 밝히고 정치인간 화해협력을 강조하고 있어, 향후 여야의원이 모두 포함되는 남북한 국회회담을 제의할 가능성이 있음.

- 남북국회회담과 관련 북한은 이미 1985년 7월 3일부터 1990년 1월 24일까지 12회에 걸쳐 국회회담 예비접촉을 실시한 바 있음

<국가보안법 폐지 주장 지속>

○북한은 국가보안법과 같은 민족대단결을 저해하는 '제도적 법률적 장애' 제거를 주장하고 있는 바, 국가보안법 폐지를 지속적으로 주장할 것으로 보임.

<이산가족 문제 진전>

○북한은 이산가족 문제를 '인도적 문제'로 규정, 적극적 해결을 주장하고 있는 바, 이산가족 생사확인, 서신거래, 면회소 설치 등 이산가족관련 현안이 원만히 타결될 것으로 보임.

- 다만 북한이 잔여 비전향장기수 송환문제를 전반적인 이산가족 문제에 연계함으로써 난항을 조성하게 될 가능성이 있음.

<통일전선전술 지속>

- 8·15 광복절을 민족대단결 차원으로 승화시킨다는 명분하에 북한은 남북사회 각계각층이 망라된 광복절 행사 개최를 제의할 것으로 전망됨.
- 노동계, 여성계, 학생, 진보단체의 '6·15~8·15 민족통일촉진운동 기간'에 대한 적극적 참여를 촉구

<사회문화교류 확대>

- 남북화해협력 분위기 제고 및 통일주도권 확보를 위해 북한은 당국간 사회문화 교류를 활성화할 가능성이 큼.
- 예술단 교환
- 태권도 교환경기
- 종교인 교류
- 관광단 교환
- 방송교류협력 등

5. 대외분야

가. 개요

- 북한은 2001년에 들어오면서 각종 문건을 통해 지난해 외교적 성과를 자화자찬하며, 올해에도 대외관계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임을 시사하고 있음.

- 2001년 공동사설에서 북한은 “5천년 민족사에서 오늘처럼 우리나라의 국제적 지위가 최상의 경지에 오른 때는 없었다”며 외교적 성공을 높이 평가함.
- 북한 외무성은 “나라의 대외적 권위를 비상히 높여 나가기 위한 사업을 보다 책임지고 함께 나감으로써 새 세기에 우리 공화국의 존엄과 영예를 또다시 온 세상에 힘있게 떨쳐 나가겠다”고 강조함(중방, 1. 21).

○ 이와 같은 자신감을 바탕으로 북한은 올해에도 매우 공세적인 외교활동을 펼칠 것으로 전망됨.

- 그러나 미국의 부시 정부가 강경한 대북정책을 구사할 경우, 북한이 작년과 같은 큰 외교적 성과를 거두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있음.
- 아울러 북한이 여전히 자주성을 강조하고 있고, 제국주의에 대한 반감을 드러내고 있는 만큼, 대외관계 개선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임.

나. 분석

○ 북한은 지난해 전방위 외교활동을 통해 이탈리아, 필리핀, 영국, 호주 등과의 수교, 미국과의 고위급 회담 성사, ARF가입 등의 성과를 거두었는 바, 이는 북한에게 외교적 자신감을 심어준 것으로 평가됨.

○ 지난 1월 김정일의 중국 방문은 올해 북한 대외활동의 방향과 관

련하여 시사하는 바가 큼.

-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상하이를 시찰하고 중국의 개혁·개방정책을 높이 평가한 것은 북한의 대외개방 의지를 시사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바, 북한은 경제적 협력기반을 위한 대외활동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것임.
- 김정일은 장쩌민과의 정상회담에서 미국의 국제 패권주의에 대항하고 이를 위해 단결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였는 바, 북한은 대미 관계개선을 위해 노력하면서도, 부시 행정부가 대북 강경책을 구사할 것에 대비, 대중·소 협력외교를 강화할 것임.

○북한은 1월 중 이미 네덜란드, 벨기에와 공식 외교관계를 수립하였고, 독일도 대북 수교를 결정하는 등 대유럽 외교활동이 가속화되고 있음.

- 특히 유럽의회가 북한과 EU, 그리고 북한과 개별 EU 회원국간의 수교를 촉구함으로써 북한은 유럽과의 관계개선을 확대할 수 있는 호기를 맞이하였음.

○대내적 차원에서 북한은 외교활동의 활성화와 이를 통한 경제적 재원 마련을 김정일의 업적 강화에 활용할 것임.

- 예를 들어 올해 공동사설은 “위대한 김정일 동지의 정치실력은 온 민족을 매혹시키고 온 세계를 격동시켰다”고 강조함으로써 대외활동에 있어서의 성과를 김정일의 업적으로 돌림.

다. 전망

<대미관계 개선 담보 가능성>

○북한은 올해에도 대미관계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으로 보임.

- 조총련 기관지인 조선신보는 미국의 부시 행정부가 대북 문제에 있어 클린턴 행정부보다 보수적인 색채를 띠고 있지만 북·미관계 개선의 흐름을 되돌릴 수는 없을 것이라고 전망함.

○그러나 부시 행정부가 ‘힘의 외교’를 표방하고 있고, 특히 북한에 대해 엄격한 상호주의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됨은 물론, 핵·미사일 등 대량 살상무기에 대한 조치뿐만 아니라 새로이 재래식 무기 감축을 요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향후 북·미관계 진전에 많은 난관이 있을 것으로 전망됨.

- 최근 파월 국무장관이 김정일을 독재자로 비난하고, 이에 대해 북한이 비난 성명을 발표한 것 등은 북·미 관계개선이 쉽지 않을 것임을 시사함.

<대일수교협상 지속>

○북한은 일본과의 수교협상을 지속할 것임.

- 김정일이 중국 방문시 일본과의 관계개선을 희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, 특히 경제적 재원 마련 차원에서 대일수교가 필요함.

- 일본도 고노 외상이 북·일수교는 불가피하다고 언급하는 등 수교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음.
- 그러나 북한은 사죄와 보상을, 일본은 납치문제 및 미사일 문제 해결을 요구하고 있어 협상 타결에는 여러 난관이 따를 것으로 보임.
- 특히 북한이 최근 일본의 군사화 경향 등에 대한 비난을 지속하고 있고,
- 일본의 대북정책은 미국의 정책으로부터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고려할 때, 북·일수교 협상도 보다 많은 시간을 요할 것으로 보임.

<대중·러 유대 강화>

- 김정일의 중국방문이 시사하듯이 북한은 경제문제, 남북관계, 대미관계 등을 고려, 대중 협력외교를 더욱 강화할 것으로 전망됨.
- 특히 김정일은 미국의 보수·강경 정책에 대비, 중국은 물론 러시아와 협조체제를 지속·강화하려 할 것임.
- 김정일은 장쩌민과의 정상회담에서 미국의 국제 패권주의에 대항하고 이를 위해 단결을 강화해야 한다고 의견을 같이 했다고 보도됨.
- 북한은 중국 및 러시아와의 협조체제를 강화할 경우, 이들의 힘을 이용, 미국의 압력을 견제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.

○부시 행정부의 NMD 및 TMD 개발 계획에 대해 중국 및 러시아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바, 미국이 이 계획을 본격화 할 경우, 북·중·러 간의 협력체제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임.

<대유럽 외교 확대>

○북한은 최근 벨기에, 네덜란드 등과 수교하였고, 유럽의회가 대북 수교를 촉구하는 등 우호적인 분위기를 활용, 대유럽 관계개선 노력을 확대할 것으로 전망됨.

- 스페인, 룩셈부르크, 그리스 등도 올 상반기 중에 북한과 수교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.

○북한은 미국의 대북 강경책에 대비, 유럽과의 관계 확대를 통해 국제사회진출을 기정사실화 함으로써 미국의 압력을 견제하려는 의도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보임.

- 아울러 한국전쟁 참전국과의 수교를 통해 휴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는데 있어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고, 특히 미국과의 수교 및 평화체제협정 체결 압박 수단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있음.

<남남협력 모색>

○대외 경제협력 기반 확대 등을 위해 지난해 각종 비동맹국 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북한은 올해에도 제3세계 국가들과의 협력기반 구축을 위해 노력할 것으로 전망됨.

- 이와 관련, 최근 북한 노동신문(1. 17)은 비동맹 및 개발도상국
가들이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‘남남협조’를
확대 발전시키는 데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하였으며, 특히 경제
및 기술적 협조와 교류를 광범위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하
였음.

Ⅲ. 정책적 고려사항

<구체적인 대북 지원대책 강구>

○북한은 점차적으로 정권의 안정을 회복해 감에 따라 보다 자신감 있게 경제특구 건설 등 대외개방의 폭을 넓혀 나가고자 할 것인바, 북한의 이러한 개방추세가 지속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지원대책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.

- 서방국가 및 여타 지역국가와의 수교를 적극 지원하고 국제기구들로부터 개방정책에 필요한 자본지원을 유도할 수 있는 국제협력 지원방안 모색
- 북한 경제특구 건설에 필요한 에너지(전력) 지원 문제에 대해서도 보다 전향적인 자세로 접근

<전향적인 대북 접근자세 견지>

○북한은 「6·15 남북공동선언」이행을 강조하면서 ‘남북한의 그 누구와도 접촉하고 대화’할 것이며 남북한의 교류와 협력이 지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함으로써 전방위 남북대화에 적극성을 보이고 있는 데 대하여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접근할 필요가 있음.

- 전력협력, 도로연결, 임진강 유역 수해방지 사업, 동해어장 제공 문제 등과 같은 구체적 경제협력 사업에 대해서는 조속히 대화를 추진하여 남북대화의 분위기를 지속시켜 나감.
- 각계각층의 남북대화 주장에 대해서 이를 단순히 ‘통일전략전술’ 차원에서 부정적으로만 받아들이지 말고 보다 자신감을 가지고

대응할 필요가 있음.

- ‘연방제’통일에 대한 요구에 대해서는 통일논의를 본격화하기 위한 구체적 협의제 구성을 북측에 제안하여 남북양측의 합의를 유도

<대미외교 강화>

- 북한은 미국의 부시 신 행정부의 대북 강경노선 표방에 대응하여 발빠르게 중국 및 러시아와 새로운 협조체제를 구축하고자 노력함으로써 한반도 주변에는 ‘새로운’ 냉전구도가 형성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바, 미국의 강경 일변도의 대북노선을 완화하기 위한 대미외교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.

연구책임자: 정영태(북한연구실 선임연구위원)

연구참여자: 전현준(북한연구실 선임연구위원)

오승렬(북한연구실 연구위원)

최진욱(북한연구실 연구위원)

홍용표(북한연구실 연구위원)